

인터넷 여론조작과 숙의적 정치커뮤니케이션

Internet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nd Deliberative Political Communication

한수경 _인천대학교

Han, Su-Kyung _Inchon University

초록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온라인 조작이 여론과 숙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권은 직접적인 언론통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권력유지에 이용해 왔다. 디지털시대에서 인터넷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 방식에서 쌍방향적 방식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출과 정보와 의견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며, 따라서 인터넷이 자유롭고 동등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으로 시민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쉽게 공적사안에 관여하며, 정부의 정책입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를 실행함에 있어 디지털 격차나 온라인 감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약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과 비판적 댓글도 흔히 온라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2012년 대선기간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상에 정부정책과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댓글과 기사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라인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감시 문제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사이버 망명' 길에 오르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숙의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적 토론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주제어: 온라인 감시, 여론조작, 전자민주주의,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침묵의 나선이론, 정치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online manipulation by the government on political public opin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Dictatorial and Authoritarian governments have been attempting to directly control media to ma-

manipulate public opinion in maintaining their political power. In the digital era, internet is regarded as a threat for authoritarian regimes, because the communication wa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has been revolutionary changed from one-way to two-way communication. Individuals use the internet to freely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to share information and ideas each other. That's why the internet can be a tool for e-democracy in free and equal political decision-making. The internet enables citizens to help more direct and easily involvement in addressing public issues and to engag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of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various types of restrictions in practicing e-democracy, such as digital divide and internet surveillance. In South Korea, online censorship is often focused on political opinions and critical comments of individuals. Moreov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had manipulated public opinion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cyberspace. Agents of the NIS had posted articles and comments on the internet in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and certain presidential candidate. Nonetheless, online censorship has been intensifying in South Korea. It's no wonder that more and more citizens are going into 'cyber-exile' due to digital censorship concern. Therefore, it is quite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net can be used as a public platform in deliberative political communication.

- Key words: online censorship,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e-democracy, public sphere, deliberative democracy, spiral of silence theory, political communication

I.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으로 명명될 수 있다. 인터넷 이전시대에 국가는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통제 방식은 독재국가를 제외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미발달하거나 불완전한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언론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변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언론통제 수단은 인터넷이 활성화 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사회에선 무너진 듯 보였으며, 반면에 시민들의

발언권이 확대되어 인터넷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는 높았다. 더불어 인터넷이 풀뿌리 혹은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과 기대도 이어졌다.

2002년 당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노무현 후보는 주류 인터넷 이용자인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치적 여론형성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국가의 강압적인 힘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란 착각을 하게 했다. 인터넷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치적 효과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층과 진보적 성향의 주류 인터넷 이용자, 즉 네티즌들의 발언활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당선 및 촛불시위를 이끌어 냈던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정부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인터넷 규제를 통해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십알단’과 같은 댓글알바를 통한 인터넷 상에서의 적극적인 여론조작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작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 당선에 불복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론을 잠재하려는 시도와 인터넷상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의문과 비판적 의견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통보해 왔다. 인터넷상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이 여론조작으로 노골화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여론은 왜곡되고, 인터넷이 시민들의 발언권과 속의적 토론을 보장해주는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더욱 요원해졌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국가기관이 방해함으로써 뉴미디어시대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훼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이며, 한국에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했는가를 살펴보고, 인터넷이 숙의적 정치커뮤니케이션, 즉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Ⅱ. 전자민주주의 실현과 한계에 대한 논의

1. 전자민주주의 실천적 모델

인터넷은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소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희망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의 낙관론과는 달리 많은 제약들로 인해 인터넷으로 인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논의가 대두되었다. 김용호와 박성우(2005)는 전자민주주의를 정보제공형, 국민투표형, 토론 및 숙의형, 그리고 다원적 공동체형의 네 가지 유형의 실천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 국민에 의한 행정권력 감시 및 감독 강화,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인터넷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주주의가 부흥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정보의 과부화(information-overload) 현상은 시민 개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무력감을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¹⁾ 따라서 권력감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정보의 체계적인 전달이 요구되며,²⁾ 또한 정보생산 자체와 생산정보 내용에 대한 논의도 전제

1) 김용호·박성우,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1-32.

2) 윤성이, “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계간사상』(여름호, 2003), 김용호·박성우 (2005). 32-33 재인용.

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투표형 전자민주주의는 여론조사와 전자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델로 간주된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국민의견수렴 방식의 문제는 합리적인 속의의 토론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기계적인 다수결 원리만이 반영될 위험성을 내재한다는 점이다.³⁾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의 경우 조작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설사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할지라도 조작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토론 및 속의형 전자민주주의는 정보제공형과 국민투표형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적 영역을 기반으로 “비판이 열려있는 합리적인 공적심의의 중요성”⁴⁾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 공동선에 이르도록 하는 합의과정”⁵⁾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이는 하버마스(1962, 1990)의 공공영역의 개념을 체계화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해야하며,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토론으로 공적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경계를 초월해 과연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토론되고 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사이버공간이 공공영역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⁶⁾ 그리고 넷째, 다원적 공동체형 전자민주주의는 속의적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시킨 형태로 개인의 삶이 사회적 관계와 결부되어 있음으로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이버공간의 공공영역은 개인과 집단들 간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사이버

3) 김용호·박성우 (2005). 34.

4) 같은 책, 35.

5) 같은 책, 35.

6) 같은 책, 35.

공간이 이러한 이상적인 전자민주주의 모델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전자민주주의의 모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봐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김용철과 윤성이(2005)는 전자민주주의의 한계를 세 가지, 즉 ‘정치참여와 정보불평등’, ‘전자감시와 전제정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요약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비판해온 문제들이며,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대한 맹종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적은 여전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다음 장에서는 김용철과 윤성이의 지적과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와 한계들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1) 정치참여와 정보불평등 문제

김용철과 윤성이(2005)가 지적한 한계인 ‘정치참여와 정보불평등’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정보격차와 정치참여 제약의 문제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소유와 무소유에 따른 “정보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⁸⁾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한정될 경우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통한 권력분산은 가로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력집중 현상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⁹⁾ 디지털 격차 현상은 IT기술이 발달한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에,¹⁰⁾ 한 국가 내에서는 도시와 시골지역 간에, 또는 젊은 층과 노년층,

7) 같은 책, 38-39.

8) 김용철·윤성이.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5). 259.

9) 같은 책, 265.

10) 세계 지역별로 인터넷 이용자수를 살펴볼 때, 북미는 84.9%, 유럽 68.6%, 호주 및 오세아니아

즉 세대 간에 발생한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는 한 국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 거주 지역, 소득수준, 또는 교육수준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치성향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 정치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고속 인터넷과 더불어 이용자수가 약 85% 정도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할 수 있으나,¹¹⁾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는 특히 세대 간의 정보격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여론형성에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전통적 미디어보다 인터넷을 더 자주 이용하는 젊은 층과 여전히 전통 미디어 특히 TV방송의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 간의 정보의 격차는 정치성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발전했다.

미디어 이용에 따른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한국에서처럼 이토록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단순히 미디어 이용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노년층이 설사 TV방송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젊은 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하는 정보와 TV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는 분량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주요 문제들을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인터넷상에서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67.5%, 남미 49.3%, 중동 44.9%, 아시아 31.7%, 아프리카 21.3%이며, 그리고 세계평균은 39.0%이다(2013.12.31 기준). World Internet Stats. 2014. "Internet Users in the World by Geographic Regions - 2013 Q4."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2014.10.16)

11)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시아에선 일본이 86.2%의 인터넷 이용자수로 가장 많으며, 유럽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90%가 훨씬 넘는 인터넷 이용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국가들도 영국 89.8%, 독일 86.2%, 프랑스 83.3% 등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World Internet Stats 사이트 참조,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따라서 인터넷 이용과 거리가 먼 노년층과 정치적 대화와 교류는 존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정치적 성향은 달라진다.

한국의 방송환경에서는 특히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¹²⁾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MBC, EBS 등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 및 임원 임명을 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KBS를 예를 들자면, KBS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성을 현재 여야 추천인사 7:4의 비율로 여당의 추천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표는 형식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하나 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불공정한 선출방식으로 인해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방송의 공정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다.¹³⁾

이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때문에 KBS 김인규와 김환영 사장, 또 MBC 김재철 사장 등 ‘낙하산’ 사장들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영방송 KBS와 MBC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작동되며, 이에 반하는 기자들과 방송인들은 부당해직되는 신세가 되기 일쑤다. 이러한 사태는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사들이 ‘낙하산 사장’과의 전쟁을 치르며 파업에 돌입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언론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또한 2012년 7월엔 KBS, MBC, EBS 등의 사장임명을 위한 이사회의 여야추천위원을 동수로 하는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근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¹⁴⁾ 지난

12)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수경, “대통령의 권한 놔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한다고?” 『미디어스』 2012년 7월 9일자 칼럼을 참고할 것.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8>

14) 권순택, “MBC에 김재철을 다시 못오게 하려면?...‘낙하산’ 근절 법안 발의됐다.” 『미디어스』 2012년 7월 6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8> (2014.10.15)

2014년 6월에도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길환영 방지법, 어떻게 만들어야하나?”란 제목으로 있었지만,¹⁵⁾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매일경제와 함께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종합편성(중편)채널을 허가해 주었다.¹⁶⁾ 이 미디어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시민들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기자협회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투표를 했더니 의결정족수가 모자랐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강행했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일념에 상식 앞에서도 눈을 감았다. 그런 식으로 한 재투표는 어땠겠나. 동료 의원들의 자리를 몇 개씩 뛰어다니며 대신 투표를 해줬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저지른 불법이다. 이대로 라면 될 때까지 투표한 법이 불법 투표를 통해 국회를 버젓이 통과한 셈이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통과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이 논란 투성이의 미디어법을 절차에 따른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했다. 그리고 이 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끌었던 언론노조 위원장은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채워 잡아갔다.¹⁷⁾

이처럼 신문시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환경도 한층 보수되었으며, 원래의 목적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는 사라지고, 방송의 보수성과 선정성으로 방송 환경은 악화되었다. 이 종편채널들은 불공정 특혜를 받아 왔고, 부실 및 편파심

15)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2014년 6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16) 김중우, “여, 언론법 국회 ‘날치기 통과’” 『한겨레』 2009년 7월 2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7213.html> (2014.10.10)

17) 한국기자협회, “‘미디어법 날치기’는 언론자유 말살” 2009년 8월 5일.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21077> (2014.10.15)

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괴물방송’이란 말까지 듣고 있으며,¹⁸⁾ 결국 한국에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러한 언론 및 방송환경에서 방송과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은 젊은 층을 사이버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사이버공간은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다른 네티즌들의 공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컴퓨터기술과 함께 성장한 20-30대는 공론장의 역할을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과 시민단체 등이 인터넷을 대안매체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¹⁹⁾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적 토론의 장은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토론방에서 SNS로 이동하며 확산되었다. 이렇게 기존 미디어 특히 TV방송에 의존적인 노년층과 젊은 층 사이엔 단순한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닌 기술소유와 이용에 따른 정보접근과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특히 국내에선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나타나며,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가 서로 다른 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난제로 남아 있다.

2) 전자감시와 전제정치 문제

‘전자감시와 전제정치’의 문제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으로 표현되는 감시시스템인 ‘파놉티콘(Panopticon)’²⁰⁾은 인간이 어떻게 지배와 권력에 순종하며 굴복하는지 밝히고 있다. 벤담은 효율적인 감금시설인 감옥²¹⁾을 통해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재사회화시킴으로써 사회를

18) 김형규, “〈‘괴물방송’ 종편, 이대로 좋은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후 종편 승인과정 온갖 위법, 편법 얼룩,” 『경향신문』 (2013.1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72256185&code=940705 (2014.10.10)

19) 김용호·박성우,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82.

20) 제러미 벤담, 신건수 옮김, 『파놉티콘』 (서울: 책세상, 2007) 참고.

21) 벤담이 설계한 감옥은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는 “고통완화의 원칙”으로 “건강 혹은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치명적인 신체적 고통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엄격한 원칙”으로 “수감자에게 죄 없고 자유로운 가난한 사회 구성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어서는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구상한 인간을 통제하는 이상적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델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효율적 경제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파놉티콘의 특징은 중앙의 높은 원형감시탑의 한 명의 감시자는 감금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감금된 사람들은 감시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전의 비대칭적 상황과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감금된 사람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규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규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는 즉, 자기감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규율을 통한 인간의 지배원리는 소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체제를 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셸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미시적 효과에 주목하며 “감시와 처벌(1975)”²²⁾에서 지식이 어떻게 권력생산에 기여하며 이를 정당화하는지, 또 권력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통치체제와 억압수단의 작동방식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18세기까지 권력은 인간을 잔인한 폭력과 고문 등의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 즉 ‘신체형’으로 권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근대의 권력은 ‘감금’이라는 감옥제도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신체를 세련된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죄수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제기술, 즉 권력의 기술이 근대화 된 데 따른 것으로 푸코는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감시의 근대화’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근대의 감옥질서가 가져온 엄격한 규율과 통제장치, 그리고 간수와 죄수의 감시관계 속에서의 권력의 지배원리는 감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공장 등 일반사회에도 확대되어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푸코는 보고 있다. 말하자면, 권력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사회의 전반적인 통제와 규율의 작동원리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즉, 근대사회에서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순응시킬 수 있는지 규율, 규제 등의 통제장치인 사회적 제도를 통해

안 된다”. 그리고 셋째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공공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가혹함이나 관대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러미 벤담, 신건수 옮김, 『파놉티콘』 (서울: 책세상, 2007), 39.

22) 미셸 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파주: 나남, 2010) 참고.

보여준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감시체제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고도화되어 인간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전자파놉티콘을 예고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전자감시체제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인터넷 이용으로 동시에 역파놉티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시민들은 정부정책 및 정치인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인터넷상에서 표현함으로써 기존 언론에 의존했던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Watchdog)의 역할에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던 체제에서 다중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뉴미디어시대에서는 ‘상호감시’인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시각도 생겨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2.0’ 혹은 ‘시위 2.0’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는 인터넷을 활용한 권력행사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민들의 역감시는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터넷의 영향력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들의 권력 감시는 시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까지 보여주었다. 뉴미디어기술에 익숙하지 못했던 올드미디어 세대인 정치 권력자들을 당황시켰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터넷 활동으로 일반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시각은 이러한 초기의 인터넷 효과를 통해 인터넷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데서 출발한 것이며, 동시에 감시를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능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발생한 착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감시능력과 일반 대중의 권력 감시기능의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디지털 흔적들을 권력자는 상세히 기록하고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인 개개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그 범위는 물론,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빈 터치가 지적한 것처럼, 각 정부는 법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정보 수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가의 감시활동의 위력

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²³⁾ 여기서도 벤담의 원형감옥인 파놉티콘에서 나타나는 시각의 비대칭성과 정보의 불균형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가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시민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도구로 악용할 경우 정치적 여론형성과정과 정책과정을 왜곡시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게 통제하기 어려운 인터넷은 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심지어 인터넷이 이러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권력 집단은 역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권력을 위협하는 집단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인지하고 있다. 즉,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들의 정보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을 권력 강화용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역파놉티콘 혹은 시놉티콘을 가능하게 한다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들, 예를 들어 위헌으로 결정된 전기통신법 47조 1항과 인터넷 실명제, 모욕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발언을 검열하는 빈도수가 날로 높아졌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열의 강도와 빈도수가 더욱 높아졌는데, “대통령 모독 발언”²⁴⁾ 이후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까지 신속히 신설했다. 즉, SNS는 물론 공개된 모든 인터넷 공간을 모니터링 대상에 넣어 관련 범죄를 수사할 방침으로 한국은 ‘사이버 감시공화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이러한 방침은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헌바88 등)으로 사라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일명 ‘미네르바법’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²⁵⁾

23) 로빈 터치, 추선영 옮김.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3), 203.

24)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까지 발족해 국내외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다. 마치 유신체제의 ‘국가모독죄’와 태국의 ‘국왕모독죄’를 연상시킨다.

25) 박지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 본격가동,” 『법률신문』 2014년 9월 26일.

또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이 전체 감청의 95%나 된다는 것이 알려졌다²⁶⁾ 검찰이 개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카톡)까지 검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국가기관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는 시민들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국가가 감시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불안한 시민들의 ‘사이버 망명’을 속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²⁷⁾ 관련 IT업체는 생존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해당업체인 다음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²⁸⁾

이렇게 사이버공간에서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감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터넷 감시국’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²⁹⁾ 인쇄기술의 발달 이후 영국에서 존 밀턴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595&kind=AD>

- 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감청’ 현황자료를 토대로 밝힌 것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감청 총 1천887개 회선 중 1천798건(95.3%)는 국정원에 의한 감청으로, 이는 2010년 대비 2013년에 42%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병헌, ‘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국정원 수행,’” 『한국일보』 (2014.10.14.) <http://www.hankookilbo.com/m/v/970580374c944974aa76c4319e0c3957>
- 27)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독일에 본거지를 둔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으로 옮겨가면서, 소위 ‘사이버 망명자’로 유명해진 텔레그램의 이용자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한국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까지 올랐으며, 텔레그램 한국어판까지 등장했다. 이서희, “텔레그램 한국어판 등장...사이버 망명 가속화,” 『한국일보』 (2014.10.06.) <http://www.hankookilbo.com/v/016edd62a6c14c6784ff43892e00063d> 참조.
- 28) 목정민,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거부선언...‘사이버 망명’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맞서는 극약처방,” 『경향 비즈라이프』 (2014.10.13.)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124061&code=940202&med_id=khan, 그리고 씨넷코리아, “카톡의 글로벌 꿈, 역차별 검역에 ‘올스톱,’” 『씨넷코리아』 (2014.10.17.) <http://www.cnet.co.kr/view/117438> 참고할 것.
- 29) 한국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57위(2014년)로 ‘인터넷 감시국’에 해당되

(1608-1674)이 검열에 반대하며 아레오파지티카(Arcopagitica, 1644)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던 것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 세기가 지난 한국에서의 검열과 감시상황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들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조지 오웰의 “1984년” 작품속의 빅브라더의 ‘진보된 감시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다.

3) 속의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의견표출로 과연 속의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는 것인데, 오히려 ‘속의민주주의의 훼손’이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전자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간에서 속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었지만, 인터넷공간에서 과연 수준 높은 정치적 토론과 속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³⁰⁾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로 한국 네티즌들의 게시판 등에서의 토론문화가 자주 제기된다. 수십 년 간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시민들의 발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침묵과 복종은 당연시되어 왔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언론을 열어주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시민들은 기존 언론들이 보도하는 의제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인터넷을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인터넷이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으로 속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외상으로 볼 때, 하버마스가 제기한 공론장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디어는 소수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전달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 및 발언의 기회는 배제되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소수

며, 또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도 68위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사이트 <http://rsf.org/index2014/en-index2014.php> 및 Feedom House 사이트 <http://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4/press-freedom-rankings> 참조.

30) 김용철·윤성이, 『전자민주주의』, 284-285.

의 엘리트 집단인 언론인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선택적으로 선별해, 즉 게이트키퍼(gatekeeping)과정을 통해 수용자(독자, 청취자,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 방식이었다. 채널을 소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정보를 받는 수용자 사이에 동등한 관계는 형성되지 않으며,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이슈가 전달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사항도 아니다. 수용자가 어떠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혹은 제공받기를 원하는지도 결국 정보를 독점하고 유폐하는 언론집단이 결정했으며, 반대로 이러한 소수집단의 정보독점과 정보유통에 대항할 시민들의 기술적, 경제적 또 지적 기반은 취약했다. 또한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집단이 권력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나 의견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다. 즉, 정보 제공자(sender)과 정보 수용자(receiver) 간의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이슈들을 언론기관이 독점해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물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책무수행을 대신하는 ‘대의제’ 형식이지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특히 권언유착의 폐해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처럼, 또 하나의 권력층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이러한 불평등한 종속적 관계가 뉴미디어 환경에서 혁명적으로 무너졌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즉, ‘일 대 다’ 방식에서 ‘다 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야말로 “공론장의 구조변동”³¹⁾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 차원에서 능동적 차원으로 ‘소통방식의 구조변동’이며, 또한 ‘소수’에서 ‘다수’로의 ‘소통의 권력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스마트폰 환경이 이러한 소통의 변화를 주로 대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래 세상은 소셜네트워크와 모바일이 지배한다”는 “소통혁명”³²⁾ 혹은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혁명”³³⁾ 등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

31) 여기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62)”을 비유해한 말이다.

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 그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그 속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기술의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시민들의 토론능력을 자동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속의의 과정은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다양한 의견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의 단순한 발언들의 분출은 속의의 개념과 사실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속의적 토론이 가능한 공론장을 박승관(1993, 2013)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엑소가미’와 ‘커뮤니케이션 평등성’을 모두 구현한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관련주체들 사이의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활성화되고 커뮤니케이션의 균형성과 형평성, 즉 평등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개방적, 민주적, 다원적, 주체적”이며, 관련주체들 간에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합의를 지향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상호 커뮤니케이션(free and full inter-communication)’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이와 반대의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와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폐쇄적이며, 일방성과 독점성을 띠고, 관련주체들이 비소통적이며 대립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은 “배타성과 상호불신에 바탕을 두고, 첨예한 갈등과 적대감, 경계심, 통제 의식, 지배의지로 충만”³⁵⁾되어 있다. 엔도가미 질서에서는 잠재적 갈등과 대립상황은 폭발력을 갖고 사회정치적 위기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32) 조상현·김현. 『소통혁명』 (서울: 황금사자, 2010).

33) 이상호·김선진.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혁명』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1).

34) 박승관,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한국정치평론학회 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그 위기』 (서울: 인간사랑, 2013), 52-53.

35) 같은 책, 54.

박승관은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만이 뭉치는 ‘끼리끼리 커뮤니케이션’ 혹은 ‘편가르기 커뮤니케이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³⁶⁾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사회의 모든 층위들이 고립적이고 폐쇄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폐쇄회로들은 마치 단자(monad)들처럼 서로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으로 존재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처럼 상호 고립되어 있는 폐쇄회로들을 가로지르는 경계간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³⁷⁾

한국사회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습성은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의 소통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외형적 특성으로 볼 때, 인터넷은 접근성이 쉽고 열린 구조이지만, 실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관찰해 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인터넷상에서 표출되는 네티즌들의 발언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서로 유사한 견해를 지닌 네티즌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성하고, 상이한 의견을 지닌 네티즌들이 소수자로 전락해 공격당하고 이로 인해 결국 상이한 의견을 지닌 네티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과 댓글 문화는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의견의 공유와 이성적 토론보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심지어 욕설과 타인을 모욕, 비방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예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의 타인에 대한 비하 및 인격침해 등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 것처럼, 이 경우는 공론장의 역할보다는 ‘사이버 쓰레기장’의 역할을 한다 하겠다. 또한 페이스북의 경우는 ‘폐친(페이스북 친구)’로 불리듯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에서 서로 ‘좋아요’를 누르며, 콘텐츠를 공유

36) 같은 책, 54, 56-57.

37) 같은 책, 56.

하고 유포한다. 트위터의 경우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유포가 흔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유명인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속의적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기존에 습성화되었던 폐쇄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사이버 공간이 탄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민주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개개인의 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확고히 보장되어야 속의적 토론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의견표출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인터넷처럼 열린 공간이라 해도 자유롭고 동등한 토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Ⅲ. 인터넷 여론조작과 정치여론에 미치는 영향

1. 국가기관의 인터넷 여론조작의 실태

앞에서 언급한 전자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들 이외에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여론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인터넷상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인 국정원 심리전단,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게시물 및 트윗 활동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작을 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밝혀내기 시작했고,³⁸⁾

38) 뉴스타파는 2013년 3월 1일자 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와 협조자 이 모씨가 ‘오늘의 유모(오유)’에서 각각 16개와 30개의 계정으로 90개와 160여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2000여 번 이상의 ‘추천’ 혹은 ‘반대’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의 활동은 8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1주일 후로,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면, ‘MB정부 찬양’하거나 혹은 ‘정부 비판적 글들 중복’으로 몰아세우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곧이어 여러 증거들이 속출했으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시 되었다.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이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트위터에서도 65개의 문제의 계정을 찾아냈는데, 특히 ‘오빠미남스타일’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하루에 많게는 70개의 글을 올리며 ‘콘텐츠 허브’ 역할을 했고, ‘일반인으로 가장한’ 수십 개의 다른 트윗 팔로워들이 이를 퍼 나르는 역할을 하며,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유포시켰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활동은 이미 2012년 12월 11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으로 불거졌는데, 이는 전직 국가정보원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시작되었다.⁴⁰⁾ 이는 검찰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사이버 팀을 더욱 확충하였고, 2012년 2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사이버 팀을 4개 팀 70여명으로 또다시 확대했다는 것이다.⁴¹⁾ 그 이유는 “중복좌파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선전선동이 주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반정부 선전, 선동에 대응한 사이버 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⁴²⁾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홍보에서 점차 정치개입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⁴³⁾

야당과 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댓글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활동으로 인지되어 IP주소 추적 등으로 발각될 우려가 있으니 국정원 청사 외부에서 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⁴⁴⁾ 지시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 등 5명은 강남카페로 이동해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자리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오유’ 등 40여개

39) 뉴스나파, 2013년 3월 15일 방송 참조.

40) 제보의 주요내용은 국정원이 2011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안보 3개의 팀에 총 70여 명을 배치하고 매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실상” 2012년 12월 12일. <http://minjoo.kr/archives/46983> (2014.10.10)

41) 서울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2013.6.14.) 7.

42) 서울지방검찰청, 7.

43) 특별취재팀, “국정원 엘리트 70명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한겨레』 (2012.12.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765.html (2014.10.12)

44)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실상” (2012.12.12.) <http://minjoo.kr/archives/46983>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물을 올리고 동료들이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게시물 3-4건, 한 달 1200-1600건을 올리고 게시물 목록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일주일마다 작업장소를 이동하며, 또 일주일마다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은 안보포털(1팀), 국내포털(2팀), 커뮤니티(3팀), SNS(5팀)으로 4개 팀으로 나뉘지는데, 예로 ‘커뮤니티(3팀)’은 다시 ‘신매체’, ‘블로그’, ‘아고라’, ‘오유’ 등으로 구분되었다.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한 것처럼, 각 팀은 수 십 여개의 사이트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한 사이트는 주로 네이버, 다음, 오유, 투데이이며, 보배드림 등으로 검찰조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수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의 기본임무를 ‘대통령 국정수행 보좌 및 지원’과 ‘중복좌파 세력 척결’에 두었으며,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곧 국가안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위기 극복 실적 등 국정성과 홍보”,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복지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 관련 반정부 세력 대응 및 정부 입장 지지”, “선거에서 중복좌파가 지원하는 일부 야당 및 재야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입 차단” 등을 위한 업무를 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운영방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우병 촛불 사태’가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선전, 선동함으로써 악화되었으며, 정부당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중요 사안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국정원도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⁴⁶⁾ 국정원장의 소위 ‘사이버 작전지시’는 국정홍보 이외에 ‘중복척결’에 집중해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모두 제거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음의 몇몇 지시내용에서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과 함께 이를 증명하고 있다.

45) 최민영 외, “그놈 손가락 - 국가기관 2012년 대선개입사건의 전말”

46)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 (2013.6.14.) 3-4쪽.

- 인터넷 자체가 중복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2011.10.21/2011.10.26 재보궐선거 직전)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중복 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편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2012.1.6./2012.4.11. 총선 직전)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중복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예요.
(2012.4.20./2012.4.11. 총선 직후)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중복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할 것임. 중복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2012.6.15./2012.12.19. 대선 6개월 전)

- 중복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편향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
(2012.11.23./2012.12.19.대선 직전)

-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지시·강조 말씀 중에서⁴⁷⁾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 공작정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2012년 12월15일)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났다.⁴⁸⁾ 당시 경찰청 분석관들이 증거를 분석하는 장면 속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댓글게시 및 유포작업을 해왔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관들이 확인한 정치·선거 자료 출력물이 분석종료 시점에는 100여 쪽에 달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2012년 12월 16일 밤에 모두 폐기하고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고 수사를 오히려 방해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씹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등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활동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처음엔 좋아했으나, 그 다음날 서울경찰청은 국정원의 “게시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증거를 은폐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바로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 밤 11시에 뉴스속보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⁴⁹⁾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2012년 12월16일)에서는 밝혀진 사실들을 어떻게 은폐할지를 모의하는 내용까지도 담겨있으며,⁵⁰⁾ 경찰수사결과가 또 어떻게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이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비난 게시글을 발견하며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명백히 파악했으나, 선거 관련 문제와 언론보도를 우려한다. 검찰조사로도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12-16 01:16>

(분석관1)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진짜진짜라면’

47) 서울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43-45.

48)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경찰 CCTV] “자기가 글쓰고 추천해요. ㅋㅋㅋ” (국정원 대선개입 유형) 『민중의 소리』 2013년 7월 31일. <http://www.youtube.com/watch?v=MmmgQE9qkDE> (2014.10.11)

49) 최민영 외, 그놈 손가락 - 국가기관 2012년 대선개입사건의 전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storytelling_view.html?art_id=201401220000001&code=910110 (2014.10.10)

50) 최민영 외, “그놈 손가락 - 국가기관 2012년 대선개입사건의 전말”

(분석관2) 그 아이디어가 컴퓨터 안에 있었어.

(분석관1) 아니 그거 너가 준거 있잖아 거기서 여기 델리트를 검색했던 말야, 델리트를 하려면 자기 암호 패스워드를 쳐야해. 이 유알엘이 오늘의 유머 자기 게시글을 삭제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유알엘이야.

(분석관3) 델리트 명령을 보내고 하는 유알엘이라는 거잖아 그게 있어

(분석관2)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북한 로켓 관련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

(분석관1)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나가야할 거 아냐

(분석관1) 안되죠 나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분석관2)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

(분석관1)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분석관2) 그거 혼자서 안했을 거 아냐.

(분석관1) 그리고 직원 한명이겠냐고 너 같으면. 초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파일을 받았잖아. 그게 몇 명한테 쓰라고 파일을 줬겠지. 그럼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이디 번갈아 쓰면서.. 왜냐하면 IP주소는 바꿔야 할거 아냐.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 속 대화 일부⁵¹⁾

경찰수사결과가 이렇게 조작,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검찰도 밝혀냈으며,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이용한 선거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정상적인 수사공보를 빙자한 수사결과발표가 선거 직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도록 왜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수사결과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前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⁵²⁾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국정원사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수사과장도 진술에서 “경찰 수사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으며, 수사

51) 서울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54.

52) 서울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2.

결과가 의도적으로 조작, 축소되었음을 폭로했다.⁵³⁾

그러나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과 서울청의 수사결과 조작, 은폐, 축소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원사건을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권에 협조하지 않은 인물로 찍혀’ 수난을 겪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느닷없이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졌다’(2013.09.12)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불륜사건’으로 변질되어 결국 선정적인 막장드라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권력과 야합한 보수언론의 이러한 ‘몰타기’ 수법은 가히 성공적이었다. 사건조사과정에서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으로 주류 언론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려 놓았으며, 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선정적인 보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행태를 앞장서서 보여주었다. 결국 사퇴한 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위법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에서 배제시키고 ‘사실상 항명’으로 징계 처분되었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특별수사팀은 ‘외압’에 밀려 결국 해체되었다.

이러한 사건 조작, 은폐 및 방해 과정 속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2,200만 건의 국정원 불법협의를 게시글을 파악했으며, 121만 건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는 2011년 1월-2012년 12월 동안 국정원은 2,270개의 트윗계정으로 유포시킨 것이다.⁵⁴⁾ 이렇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인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그동안 상당히 드러났지만, 이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가기관의 여론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예측되는 이유이다.

또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사이버사령부 출신 고위 군인의 양심선언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을 입증하고 있다.⁵⁵⁾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국방부는 ‘자체수사’ 결과에서 심리전단

53) 팩트TV, “국정원국정조사 19일 청문회(6) -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눈물의 양심발언” 2013년 8월 19일. <http://www.youtube.com/watch?v=OllUESOviGM> (2014.10.11)

54) 전해원, “국정원 트윗 2200만 건 검찰이 찾아내기까지...” 『시사인』 (2013.12.14.) 제326호, 42-43.

요원들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총 28만 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천여 건이라 밝혔다.⁵⁶⁾ 결국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없었다’는 예견된 결과를 발표했으며, 또한 제기된 국정원과의 관계도 부인했다. 또한 윤 목사가 단장으로 있었던 새누리당 SNS 불법선거운동 조직인 일명 ‘십알단’(십자가 알바단)은 대선 직전에 적발되었으며,⁵⁷⁾ ‘박사모’의 ‘사이버 전사’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일반인을 가장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⁵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양과잡질’이다. 까면 갈수록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국가조직들, 보수 세력의 광범위하고 유기적 개입의 실체가 드러난다”⁵⁹⁾는 말처럼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적 여론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서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항)”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2항 2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활동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2항 5호).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관찰하면, 이러한 법조항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명백한 법과 불법행위의 증거가 속출했지만, 진실은 은폐되고 거짓만이 판을 지는 형국이 되었다.

특히 국정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장 개인의

55) 고제규 김은지, “모든 게 원세훈 원장 때 벌어졌다,” 『시사인』 (2013.11.30.), 제324호, 22-25.

56)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2013.12.19.)

57) 강성원, “검찰, 국정원 직원, 댓글알바 ‘십알단’ 활동 인정했다,” 『미디어오늘』 (2014.3.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64>

58) 대선 전인 2012년 10월 14일에 수여한 ‘박사모’의 임명장에는 “대한민국 박사모 사이버 전사대 특별대원”으로 임명한다는 글이 적혀있다. 아이엠포터, “‘십알단’, ‘박사모’ 사이버 전사를 아시나요?” 2012년 10월 25일. <http://impeter.tistory.com/2005> (2014.10.11.)

59) 최민영 외, “그놈 손가락 - 국가기관 2012년 대선개입사건의 전말”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타당한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 관련자들은 대부분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국정원 댓글 판결, 즉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자신의 글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나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⁶⁰⁾

현직판사의 용기 있는 비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냈지만, 그의 글은 곧 삭제되었고 그 역시 징계 청구되어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사실을 밝히려는 양심적 법조인들과 경찰관계자들은 제거당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여론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2. 인터넷 여론조작과 그 효과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의 여론조작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60)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법치주의는 죽었다”(2013.09.12) 중에서 인용. 박소희,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오마이뉴스』 (2013.9.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 (2014.10.11.)

의사형성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행위인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내국민들을 상대로 대북심리전을 폈다는 논리로 여론개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며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인터넷상에서의 댓글과 트윗활동이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사이버상에서의 댓글활동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여론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 1974, 1991, 1994)의 ‘침묵의 나선(Schweigespirale)’⁶¹⁾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대중매체가 개인을 둘러싼 의견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즉 “인간은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무엇이 증가하고 줄어드는지 미세한 것까지 감지할 수 있다”⁶²⁾는 것이다. 노엘레-노이만은 침묵의 이유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립의 두려움을 들고 있으며, 또한 신체의 오감 이외에 제6의 감각기관, 소위 ‘유사통계 감각기관(a quasi-statistical sense organ)’이 있어 여론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표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고립을 두려워하기에 주변 분위기, 즉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조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해 의견 분위기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할 수 압력(Konformitätsdruck)’을 받게 된다.⁶³⁾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인간

61) ‘침묵의 나선(Schweigespirale, Spiral of Silence Theory)’ 이론을 흔히 ‘밴드 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동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밴드 왜건 효과’의 경우 승자의 편에 편승함으로써 긍정적 보상을 받는 반면에,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는 동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이 다르다. Elisabeth Noelle-Neumann, “Öffentliche Meinung” in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379.

62) Elisabeth Noelle-Neumann, “Öffentliche Meinung,” 378.

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로마인들은 추방되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사형 선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만큼 인간은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혼자라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한다는 것이다.⁶⁴⁾

즉,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지지되는 것이 관찰될 때 더욱 힘을 얻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반면에 자신의 의견이 지지받지 못할 때 침묵하게 된다”⁶⁵⁾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큰소리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의 의견은 실제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게 되고, 반면에 다른 의견은 실제보다 더욱 약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실제 다수관계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착시가 발생하게 되어, 어떤 발언은 더욱 강화되고, 다른 의견은 침묵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⁶⁶⁾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여론 분위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은 ‘사회통제’ 수단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이 사이버공간에서 댓글 및 트윗활동을 통해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조직적으로 유포시킴에 따라, 사람들은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 점차 증가함을 감지하게 되어, 야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점차 회피하게 되고 결국엔 침묵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분위기의 향방이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실제 시민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여론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야당 지지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전락하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시사인>이 국정원 직원의 게시물 1,977개를 네트워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야당=종북’ 프레임으로 조직적으로 글을 유포시켰음이 밝혀졌으며, 즉 야당 대통령 후보자 관련 단어는 북한과 연결시켰다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종북’으로 몰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종북’은 모든 이성적 토론을 마비시키는

63) 같은 책, 371.

64) Mihaly Csikszentmihlyi, “Öffentliche Meinung und die Psychologie der Einsamkeit” in *Öffentliche Meinung-Theorie, Methoden, Befunde: Beiträge zu Ehren von Elisabeth Noelle-Neumann*, ed. Jürgen Wilke (Freiburg, München: Karl Alber, 1992), 33.

65) Elisabeth Noelle-Neumann. “Öffentliche Meinung”. 371.

66) 같은 책, 379.

67) 고제규,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 『시사인』 (2013.10.12.) 제317호, 16-19.

용어로 이는 주류 미디어뿐 아니라 인터넷공간에서 변희재와 같은 보수 논객들과 일베 사이트를 통해 선정적이고 저급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비이성적 종북몰이 행태가 용납되어 온 것은 이들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북몰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급하고 공격적인 발언으로도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야당, 야당후보 및 여타 정부 비판적인 상대방에 대한 ‘종북-좌파-빨갱이’ 낙인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작업에서도 드러났으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한다는 ‘지시 말씀’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여론조작을 했는지도 서울경찰청 증거분석과정에서 찾아낸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관1) (...)애는 어떤 일을 하나하면 MB찬양하는 글이 있어, 근데 거기에 까는 글을 달어, 그러면 그거 신고해. 근데도 전체 글이 야당만 밝히고 MB를 까는 글이 있어. 삭제 신고해, 삭제 해달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여당 쪽에 좋지 않은 글 쓴 애들 있지, 걔네들 신고해서 다 삭제시켜 버린 거야. 그 일 하고 있는 거야. (...)

(분석관2)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 주세요. 이것도 우파 글이네요. 우파글을 만들어서 게시...아까 그 MB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디서 만들면 게시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분석관1) 선동글, 무력화 반대 10을 누르면 선동들은 무력화된다. 어떤 사이트에서 베스트글이 되려면 그 베스트 글이 만약에 선동글이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로 올라가서 메인창에 뜨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 10회를 누른다. 베오베는 오늘의 유머 ‘오유’. 그 방법들을 애가 짝 정리해는거죠 지금.(...)

(분석관1) 근데 또 하나 추정했던게 있어 우리가. 그 다수의 아이디를 과연 애가 혼자서 쓴거야 (분석관3):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추천하네. 숲속의잔치가 글을 쓰고 진짜진짜라면이 추천을 해요. 완전 지가 게시하고 지가 댓글 달고 그걸00한다. 업무가 되게 재미없었을거 같지 않아요? 맨날 인터넷 접속해서 게시글...(…)

-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증거분석 대화 일부⁶⁸⁾

인터넷상에서 정부비판자들을 모두 중복좌파로 낙인찍어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국정원이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다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네티즌들은 자신의 의견을 누군가가 신고하고, 결국 삭제될 때, 또 자신을 지지하는 쪽보다는 반대 의견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볼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글쓴이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의견을 지닌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을 지지하는 자신의 발언 또한 반대에 부딪칠 것을 감지하고 지지발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국 침묵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여론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국정원 직원들이 “10월 달부터 계속 썼네요. 거의 안 빼고 안 빼고 거의 사용이네. 하루 종일 사용이네”⁶⁹⁾라는 분석관의 말처럼, 국가기관 등의 댓글부대가 항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일반 네티즌들이 여론을 주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위축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법조인들조차 이에 대항하기 어려우며, 결국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원세훈 국정원 판결’을 비판한 김 부장판사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

68)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경찰 CCTV] “자기가 글쓰고 추천해요..ㅋㅋㅋ” (국정원 대선개입 유형)

69)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경찰 CCTV]

여 의연하게 곳곳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⁷⁰⁾

위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정권이 법조인들을 길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주변 분위기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신이 고립되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강한 발언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처럼 누군가 절대적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도 언급하듯이, 여론분위기에 맞서 강건히 발언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국정원 사건에서처럼 여론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상황과 검찰총장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발언이나 혹은 반대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아예 여론형성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여론 분위기를 의도한대로 제압할 수 있다.

특히 ‘중북좌파’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는 주류 미디어와 인터넷 이외에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일반 지하철 등에서 방송과 포스터 광고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 좌익사범 등을 111에 신고할 것을 종용해 왔는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중북좌파 척결’ 분위기는 이미 위험수위에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도 ‘중북’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북척결’을 내건 차량을 세월호 참사 현장까지 동원하는 비이성적 행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인터넷공간에서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여론개입은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침묵하게 만들거나 혹은 외형상 나타나는 인터넷상에서의 다수의견에 동조하게 하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디어 환경을 살펴볼 때, 주류 언론이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 및 권력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은 젊은 층과 진보적 성향의

70) 김동진, “법치주의는 죽었다”(2013.09.12).

사람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SNS를 통해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이슈들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사이버공간에까지 침투하여 일사반란하게 유폐시키는 여당 지지 발언들과 야당 비난 및 중북몰이 발언들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었다. ‘중북’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정부비판자들이 손쉽게 ‘중북’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목도한 시민들은 ‘낙인’으로 인한 고립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사를 과감히 표출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환경도 조성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규들, 즉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폐죄’,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합법적’으로 박탈해 왔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즉각적으로 색출해’ 처벌하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 왔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자로서의 책임에 앞서, SNS상에서의 시민들의 유언비어 유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우선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대통령 모독 발언”은 또 다시 사이버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는 ‘합법적 행동대원’들을 창설하여 카톡과 같은 사적인 메신저의 대화 내용까지 드러다 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신의 비밀,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이라는 기본권은 사라져버렸으며, 한국사회는 더욱 깊은 ‘디지털 암흑기’로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원수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체제와 독재체제에서 학습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은 곧 시민들의 발언을 막는 통제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체주의 국가의 신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환경변화에서 체감할 것이다. 정부가 의도한 여론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가상이 아닌 현실적 두려움에서 시민들은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발언을 조심하고 결국 침묵하게 된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여론 분위기가 반대로 변화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전엔 중복몰이 발언이 용납되어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면, 그동안 중복 발언에 익숙했던 정치인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시민들의 여론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좌파’ 논리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중복’ 발언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었다. 이렇게 변화된 여론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이들은 침묵하며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폭발로 인해 전환된 여론은 세월호 사건이 점차 언론에서 사라지고, 분노여론이 약화됨에 따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심지어 유가족들을 ‘중복’으로 매도하는 언사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하는 유가족들과 단식에 동참한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장 바로 앞에서 일베 회원들은 반대로 ‘폭식농성’이란 대답함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를 보였다. 자유대학생연합 또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을 받으며 단식농성장의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극우단체들이 이러한 엽기적인 행태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시간경과에 따라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정부로부터 비난받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권장되거나 지지되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결국 추석연휴 이후에 있었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모독’ 발언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발언으로 극우단체와 정부의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IV. 인터넷공간에서의 숙의적 정치토론의 문제점

사이버공간에서의 숙의적 정치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베스 사이먼 노벡(Beth Simon Noveck)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숙의적 토론 조건을 보다 구체화시켜 다음과 같이 10가지 요건들로 설명하고 있다.⁷¹⁾

- 1) 접근성(accessibility):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함.
- 2) 무검열(no censorship):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내용이 왜곡되지 않아야 함.
- 3) 자율성(autonomy): 소극적 사용자가 아닌 공공과정의 적극적 참가자가 되어야 함.
- 4)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 있고 합리적인 공적 토론이 되어야 함.
- 5) 투명성(transparency): 토론의 방식과 규칙이 공개되어야 함.
- 6) 평등성(equality):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한 발언의 기회를 가져야 함.
- 7) 다원성(plurality):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의견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8) 충분한 정보(staying informed):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9) 공공성(publicness):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토론이 되어야 함.
- 10) 용이성(facilitation): 토론 참가자들의 경쟁적 의견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자가 있어야 함.

위에서 언급한 10 가지 요건들을 살펴 때,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인터넷공간에서의 토론문화는 숙의적 토론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숙의

71) Beth Simon Noveck, "Uncaht: Democratic Solution for a Wired World", in Peter M. Sane, (ed.), *Democracy Online: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rough Internet* (New York, NY: Routledge, 2000), 21-24. 김용철·윤성이, 290 재인용.

적 토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인터넷 이용은 보편화되었으며, 따라서 접근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발언활동은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토론으로 공적토론이 가능해야 하지만 서로 유사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파편화된 공간이 되었다.

더욱이 검열이 없어야 함에도 한국의 경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다양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공간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특히 정치, 사회적 발언이 자유로워야 함에도 네티즌들의 표현들이 너무 쉽게 검열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검열뿐만 아니라 댓글작업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정부가 원하지 않는 의견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퇴출되고 있다. 설사 토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네티즌들은 아마도 일반시민들이 아닌 국정원 직원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원 혹은 ‘심알단’이나 ‘박사모’ 등의 ‘사이버 전사’들과 논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극도로 왜곡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토론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렇게 특수한 한국적 상황 하에서는 위의 10가지 숙의적 토론 조건에 ‘국가기관의 여론조작 금지’ 조건도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사이버공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는 제공될 수 없으며, 정보에 대한 신뢰도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성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기관을 앞세워 사이버공간을 홍보공간으로 변질시키고 다른 의견을 ‘충북’으로 몰아 침묵시키는 조작된 공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숙의적 공론장은 처음부터 조성될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비난 및 욕설 발언의 표출은 난무하거나 용인되고 있지만, 숙의적 토론문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경우 다양한 의견표출의 장으로써의 인터넷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독재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국가기관의 행

태들이 잔재하며, 권력유지를 위해 인터넷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려는 불순한 시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경청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을 몰아내는 데 오히려 총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통제 아래에서는 속의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공적토론은 불가능하게 되고, 일부 비이성적 발언들이 오히려 극대화되어 결국 인터넷상의 여론왜곡은 일상이 되었다.

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속의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란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외형상으로 시민들의 언론이 확장되었지만, 기존 언론의 정보독점과 국가권력의 언론장악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은 인터넷시대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권력유지를 위한 국가기관의 통제수단은 더욱 진화해, 한국정부가 ‘정부 3.0’을 내걸었듯이 시민들의 토론의 장인 인터넷공간에서의 통제수단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3.0으로 진화되었다.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초에 네티즌의 힘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2008년 촛불시위처럼 시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내고, 또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던 사례들은 인터넷시대를 맞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이버상의 토론환경은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려는 시민들보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은 사라지고 인터넷은 왜곡된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변질된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이슈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속의적 공론장의 기본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속의는 개인의 의견을 넘어 집단적 의사결정과

정으로 나아가는 행위로까지 발전되어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여론조작이 인터넷상에서 당연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숙의적 정치토론의 문제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인터넷상에서의 토론과정의 문제를 서구 민주주의 사회처럼 일반시민들의 의견 표출과 토론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터넷상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여론왜곡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선 시민들의 낮은 수준의 토론문화도 문제시되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몰이 현상이다. 따라서 여론왜곡 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토론문화를 탓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발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기관의 권위적인 행태부터 강력히 처벌해 시민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날로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국가기관의 사회통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는 숙의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숙의적 토론이 가능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Submitted : 2014. Oct. 22.
- ▶ Reviewed : 2014. Nov. 14.
- ▶ Accepted : 2014. Nov. 23.

References

- Choi, Min Yeong et al. 22 Jan 2014. “Geu Nom Songarak – Kukgagigwan 2012nyeon Daeseongaeib Sageonui Jeonmal.” *Kyeonghyangsinmun*.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storytelling_view.html?art_id=201401220000001&code=910110 (2014.10.10)
- Cnetkorea. 17 Oct 2014. “Katokui Global ggum, Yeokchbyeol·keomyeoke ‘All Stop’” *Cnetkorea*.
- FactTV, 19 Aug 2013. “Kukjeongwonkukjeongjosa 19il Cheongmunhoi(6) – Kwon-eunhui Jeon Susagwajangui Nunmului Yangsimbaleon” <http://www.youtube.com/watch?v=OllUESOviGM> (2014.10.11)
- Freedom House. <http://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4/press-freedom-rankings>
- George Orwell. trans. Kim Sun Nyeo. 2005. 1984. Seoul: Cheongmok Studybooks.
- Habermas, Jü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rankfurt/Main: Suhrkamp.
- Hangukgijahyuphoi. 5 Aug 2009. “Mideabeob Nalchigineun Eollonjayu Malsal.”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21077> (2014.10.15)
- Han, Su Kyeong. 9 Jul 2012. “Daetongryeongui Gwonhan Nwandugo Gongyeong-bangsongui Dongnipseong Hwagbohandago?” *Medias*.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8> (2013.10.01.)
- I’m Peter. 25 Oct 2012. “Sibaldan, Paksamo Cyber Jeonsareul Asinayo?” <http://impeter.tistory.com/2005> (2014.10.11)
- Jeon, Hye Won. “Kukjeongwon Twit 2200mangeon Geonchali Chajanaegiggaji...” *Sisain*. 326, 43-44.
- Jeremy Bentham. trans. Sin, Geon Su. 2007. *Panopticon*. Seoul: Chaksesang.
- Jo, Sang Hyeon., Kim, Hyeon. 2010. *SotongHyeokmyeong*. Seoul: Hwanggeumsaja.
- Kang, Seong Won. 3 Mar 2014. “Keomchal, Kukjeongwon jigwon, Deagllalba ‘Sibaldan’ Hwaldong Injeonghaedda.”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64> (2014.10.05.)
- Kim, Han sol. 12 Sep 2014. “Hyeonjikpansa ‘beobchijuiineun jugeokdda’ Wanschun Pangyel Bipangeul Jeonmun.” *Hangukilbo*. http://news.khan.co.kr/kh_news/

- 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1138421&code=940202 (2014.10.12.)
- Kim, Hyeong Gue. 17 Nov 2013. "Goemulbangsong Jongpyeon, Idaero Joeunga Mediabeob Nalchigi Tongwa Hu Jongpyeon Seungingwajeong Ongat Wibeob, Pyeonbeob Eolluk." *Kyeonghyangsinmun* (2014.10.10.)
- Kim, Jong Woo. 22 Jul 2009. "Yeo, Eollonbeob Kukhoi 'Nalchigi Tonggwa.'" *Hangyeore*.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7213.html> (2014.10.10.)
- Kim, Yong Ho., Bak, Seong Woo. 2005. *Jeongbohwasidaeni Jeonjamingujuui Governance*. Jeongbotongsinjeongchakyeonguwon.
- Kim, Yong Cheol., Yun, Seong Ee. 2005. *Jeonjamingujuui - Saeroun Jeongchi Paradigmui Mosaek*. Seoul: oreum.
- Ko, Je Kyu. 2013. "Igeon Danji 'Bingsanui Ilgak'il bbun." *Sisain* 317, 16-19.
- Ko, Je Kyu., Kim Eun Ji. 2013. "Modeunge Wonsehun Wondang Ddae Beoleo-jyecodda." *Sisain* 324, 22-25.
- Kukbangbu. 19 Dec 2013. "Cybersaryungbu 'Daegeul Uihok' Sageon Jungsu-sagyulgwa." Bodojaryo.
- Kukgyeongeomneun Gijahoi. <http://rsf.org/index2014/en-index2014.php>
- Kwon, Sun Tak. 6 Jul 2012. "MBCe Kimjaechuleul Dasi Modoge Haryeomyeon?... 'Nakhasan' Geunjeol Beoban Baluidoidda." *Medias*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8> (2014.10.15)
- Kyeongchal CCTV. 31 Jul 2013. "Jagiga Geulsseugo Chucheonhaeyo..kkk." (Kuk-jeongwon Daeseongaeib Yuhyeong) *Minjungui Sori* <http://www.youtube.com/watch?v=MmmgQE9qkDE> (2014.10.11)
- Lee, Sang ho., Kim, Seon Jin. 2011. *Digital Media Smart Hyeokmyeong*. Seoul: Miraereul Soyuhan Saramdeul.
- Lee, Seo Hui. 6 Oct 2014. "Telegram Hankukeopan Deungjang Cyber Mangmyeong Gasokhwa. *Hangukilbo*.
- Michel Foucault. trans. Oh, Saeng Geun. 2010. *Gamsiwa Chubeol: Gamogui Yeoksa*. Paju: Nanam.
- Mihaly Csikszentmihlyi. 1992. "ffentliche Meinung und die Psychologie der Einsamkeit." Jürgen Wilke ed. in *Öffentliche Meinung-Theorie, Methoden, Befunde: Beiträge zu Ehren von Elisabeth Noelle-Neumann*, Freiburg, München:

- Karl Alber, 33-40.
- Minjudang. 12 Dec 2012. "Kukjeongwonui Jeongchigaeb Uihokui Silsang"
<http://minjoo.kr/archives/46983> (2014.10.10.)
- Mok, Jeong Min. 13 Oct 2014. "Daum Kakao 'Cyber Geomyeol' Geobu Seoneon
 'Cyber Manmyeong' Makiwihae Susagigwane Maseoneun Geukyakcheo-
 bang." *Kyeonghyang Bizlife*.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
 tid=201410132124061&code=940202&med_id=khan](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124061&code=940202&med_id=khan)
- Newstapa. 1 Mar 2013 Broadcasting Service
- Newstapa. 15 Mar 2013 Broadcasting Service
- Noelle-Neumann, Elisabeth. 1995. "ffentliche Meinung." in. E. Noelle-Neumann,
 W. Schulz, J. Wilke, ed.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366-382.
- Noveck, Beth Simon. 2000. "Unchat: Democratic Solution for a Wired World",
 in Peter M. Sane, ed. *Democracy Online: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rough Internet*. New York, NY: Routledge.
- Pak, Ji Yeon. 26 Sep 2014. "Cyber Heowisasil Yupo Susajeondamteam Bongyeok-
 gadong." *Beobryulsimmun*.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
 Contents.aspx?serial=87595&kind=AD](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595&kind=AD) (2014.10.11.)
- Pak, Seung Gwan. 2013. "Hankuksahoiwa Communication Endogamie." Hankuk-
 jeongchipyeongronhakhoi Pyeon. *Hankuk Minjujuwa Eollonjayu Geurigo Geu
 Wigi*. Seoul: Ingansarang.
- Pak, So Hui. 12 Sep 2013. "Japanbuseun Saseumeul Garikyeo Malirahanda."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03215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 (2014.10.11)
- Robin Tudge. trans. Chu, Seon Yeong. 2013. *Gamsi Sahoi, Anjeonjangchiinga,
 Tongjedoguinga?* Seoul: Doseochulpan Ihoo.
- Seouljibangkyeongchalcheong. 14 Jun 2013. 'Gongsojang'
- Seouljibangkyeongchalcheong. 14 Jun 2013. 'Kukgajeongbowon Gwallyeon Uihok
 Sageon Susageolgwa Balpyomun'
- Teukbyeolchwijaeteam. 17 Dec 2012. "Kukjeongwon Elite 70myeong daegeulalba
 Jagoigam Neuggyeo." *Hangyer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

ety_general/565765.html (2014.10.12)

World Internet Stats. 2014. "Internet Users in the World by Geographic Regions
- 2013 Q4."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2014.10.16.)

Yeonhapnews. 14 Oct 2014. "Jeonbyeongheon, Kakaotalk·Naver Packetgamcheong
95% Kukjeongwon Suhaeng." *Hankukilbo*.

Yun, Seong Ee. 2003. "Hankukui Cyber Minjujuui." *Gyegansasang*. Yoreumho.